東亞日報
105 since 1920
1920년 4월 1일 창간 제32433호 40판 안내 02-2020-0114 구독·배달 1588-2020
단기 4358년 음력 11월 3일 乙丑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연평균 역대최고 환율… '종가 낮추기' 총력전

〈30일 외환시장 폐장〉

외환위기 직후보다 높은 1420원대 각종 대책에도 20일 1478원 마감

종가, 기업 재무-내년 환율 큰 영향 정부, 국민연금 투입 '환헤지' 전망 수출기업에 달러 신속 매도 압박도

다시 청와대로… 업무 준비하는 춘추관 브리핑룸 대통령실 직원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탈부착 업무 표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은 여민관의 한 건물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올해 외환시장 폐장일(12월 30일)을 6거래일 남겨둔 가운데 연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고환율 추세를 꺾기 위해 남은 기간 연말 환율 종가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해 말 결산 환율(1472.5원)보다 높아질 경우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달 19일까지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21.16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평균 환율(1394.97원)보다 26.19원 높다. 최근 환율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평균 환율은 1420원대로 굳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지난주 정부와 한은은 외환 건전성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19일 소폭 하락했던 환율은 1478.0원으로 20일 야간거래를 마감(오전 2시 기준)하며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처럼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시장의 기대를 꺾기 위해 올해 외환시장 폐장을 앞두고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말 환율 종가는 달러에 민감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내년 상반기(1~6월) 환율과 물가의 방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0일 1472.5원으로 마감하며 1997년 말(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 시장의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한은과의 외환스와프를 활용해 대규모 환헤지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말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킨 정부는 환율 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달 16일 국민연금과 한은은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19일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가 일부 재개된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유연하게 해서, 그에 따른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은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줄어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의 잇단 압박으로 수출기업들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8일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 환율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달러 매도를 당부한 바 있다.

이호 number2@donga.com·홍석호 기자

▶A3면에 관련기사

SNS에 빠져 소통은 단절 정신건강 상담 학생 급증

교육청 '마음건강 전문가 방문사업' 신청 학교-학생 3년새 2배로 늘어

최근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 초중고교에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요청한 학생과 학교 수가 3년 새 각각 2배로 늘어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진행하는 '학생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의뢰한 학교 수는 2022년 123개교에서 올해(10월 말 기준) 230개교로 증가했다. 마음건강 상담을 신청한 학생 수는 같은 기간 227명에서 458명으로 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위(Wee)센터 등 기관에 연계된 학생 수는 199명에서 342명으로 불어났다.

과거에는 일시적 사춘기 방황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증가, 부모와의 소통 부족에 따른 우울감 및 불안 확대가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면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생의 정신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김은주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친구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데,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대면 소통 단절이 커지면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음건강 학교 방문 사업은 정신건강이 위태로워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2021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도입했다. 학교가 정신건강이 위태로워 보이는 학생을 찾아 교육청에 알리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와 학생, 교사, 학부모와 상담한다. 필요하면 전문기관 연계 및 1인당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김민지 minji@donga.com·최예나 기자

▶A10면에 관련기사

위헌 논란에 '허위정보 손배법'도 땜질 수정

법사위, 단순착오-실수도 손배 포함 대통령실 우려 뜻, 친여단체 "폐기를"

당정, 주택공급 대책 올해 넘길듯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전달하면서다. 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친여 단체들도 "위헌적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법사위가 단순 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해) 현실론으로 많이 갔었는데, 법사위 안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한 뒤 23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처리 계획과 순서는 변함없다"며 "가급적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미세 조정과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21일 여당이 뒤늦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순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법안 자체를 즉각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연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부동산 대책이 논의됐으나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A5면에 관련기사

열흘뒤 수도권 쓰레기 못묻어… 민간 소각시설에 줄선다

4년前 예고후 공공소각장 확충 없어 민간 위탁량은 3년새 2.4배로 늘어 처리-비용 불안정성 커질 가능성

내년부터 수도권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약 40%를 민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데,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최근 4년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 민간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약 32만 t이던 민간 위탁량은 2023년 76만 t으로 3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처리 비중도 같은 기간 9.2%에서 20.9%로 크게 뛰었다.

반면 공공 매립량은 약 79만 t에서 약 61만 t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의 32개 공공 소각장은 모두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로 가동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문제는 내년부터 기존에 매립하던 쓰레기까지 소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4~2025년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매립 쓰레기를 대부분 처리해 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처리한 수도권 매립 쓰레기만 51만 t에 달한다. 이 물량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갈 경우, 민간 처리 비율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40%에 이르게 된다.

민간 의존도가 커질수록 처리 비용과 안정성은 시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부담이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에도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공공 소각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A12면에 관련기사

안세영 11승… 시즌 최다승 타이 A25면